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한도 초과한 월세액 세액공제 '10년 간 이월' 가능한 길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19일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액 공제 혜택 확대를 위해 무주택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액 초과분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무주택자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해당 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하 '공제기준근로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않고 있다.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월세액 세액공제액 초과분에 대하여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무주택세대주의 범위를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

또한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750만원으로 정하고 그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특법 개정안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소득 기준을 총급여액 9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월세액 한도를 75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상대적으로 소득 대비 월세액 부담이 큰 저소득 무주택자는 공제 혜택을 일부만 받게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월세액 세액공제 자격을 완화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한다"고 밝혔다.

전화 한 통으로 내가 낼 국세 확인... 총 26종 조회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8일부터 전화 한 통에 내가 낼 국세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를 개시한다.

지역번호 없이 1544-9944로 연락하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부동산세 등 총 26종의 국세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대상은 국세청이 결정한 고지세액이다. 납세자가 자진 신고한 세액은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할 세금 외에도 국세 체납액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핸드폰 문자로 가상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인터넷 뱅킹은행 등으로 관련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존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무실적자), 종합소득세 신고(단순경비율 모두채움) 외 국세고지 내역도 1544-9944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이번에도 5천만원 묶이나... 이달 TF 최종회의

2001년 이후 23년째 '1인당 5천만원'에 묶인 국내 예금자보호한도가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대세다. 최근 2금융권 건전성 불안 등이 돌출한 상황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일 경우 급격한 자금 쏠림이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1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위해 운영해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관련 최종 회의를 연다.

TF 연구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TF 연구용역을 담당한 민간 전문가, 은행·저축은행·보험 등 업권별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다.

TF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예금자보호한도와 관련해 ▲ 보호한도 5천만원으로 현행 유지 ▲ 단계적 한도 상향(예: 7천만→1억원) ▲ 일부 예금 별도 한도 적용 등의 시나리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정부는 '현행 유지'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2금융권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선불리 한도를 높였다가 시스템 리스크로 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금융권 예보로 인상 부담이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는 점, 물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